

## 삼성바이오 노조 준법투쟁... "AI 도입엔 동의받아야"(종합)

등록 2026.05.06 10:10:53



[인천=뉴스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전면 파업 사흘째인 지난 3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05.03. ks@newsis.com

[서울=뉴스시스]이소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닷새간의 총파업을 마치고 6일부터 준법투쟁으로 전환한다. 노사 양측은 이날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날부터 업무 복귀 및 정상 출근 후 준법투쟁으로 전환한다.

노조 측은 연장근무·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대신 GMP 환경에 맞춰 안전작업 등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 주 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6일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 1대 1 미팅 ▲8일 노동부 포함한 노사정 미팅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노사 면담이 오전·오후에 걸쳐 두 차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노동부 중부청 주관으로 열린 노사정 간담회에서도 진전 없이 종료된 바 있다.

노조 측은 당시 "의견이 좁혀진 부분은 현재로선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노사 모두 피해가 있는 만큼 출구 전략 중 하나로 노조는 격려금을 상향하되 채용 일부를 노사상생기금으로 조성해 그중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협력업체 지원 같은 재원으로 사용

하자는 부분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주에만 두 번의 대화를 더 진행하기로 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논의를 약속했으나 노사의 입장차가 커, 협상 타결로 귀결될 진 미지수다.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신규채용, 인사고과, M&A(인수합병) 등 핵심 경영사안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임직원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인사·경영권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임금 관련 사측은 6.2%의 임금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노조가 사측에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노사 공동으로 경영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신기술 도입 또는 작업 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회사가 무인 공장인 '다크 팩토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노조가 주장하는 다크팩토리 태스크포스(TF)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발생한 노조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 내용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요구안에 따르면 신입사원 기준 실제 임금 인상률이 21.3%에 달하는데,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면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또 임원 임면 통지, 성과배분 및 인력배치 시 노조 의결 필수 등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명문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단기 손실뿐 아니라 장기 수주 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 바이오 공정 특성상 생산 중단이 제품 폐기 및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인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다.

노조가 이날부터 진행하는 준법투쟁 방식에 따라 회사의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특성상 잔 특근 거부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 인력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속 직원들에게 이러한 업의 특수성을 알리는 한편,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